

【 2018.4.5(목) 강원일보 】



장은 5일 오후 4시 원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서 열리는 강원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 2018.4.5(목) 강원도민일보 】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5일 오후 4시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서 열리는 군 시설공사와 연계한 건설업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환경인프라’로 번지는 SOC 예산 축소 기조

하수처리장 확충 등 감축대상 지방중소사 수주난 심화될 듯

정부가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기반 시설) 예산을 대폭 축소한 데 이어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도 대규모 감축을 예고했다.

하수처리장 건설을 비롯해 중소규모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보조금까지 줄이기로 해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수주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전체 375개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연장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3년간 총 3368억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중복·유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0개 보조사업은 즉시(1개)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성과나 투자효율이 떨어지는 122개 사업은 통폐합(1개)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나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거나 연간 집행률이 저조한 97개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감축 대상에는 각각 연간 3000억원과 2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하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포함 정부 보조금 지원 대폭 줄이기로 신규사업보다 유지관리 비중 확대

처리장 확충사업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앞으로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의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국가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올해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은 총 3362억원으로, 감축 규모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요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규모 금액이 불가피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환경기초시설은 투자 우선 순위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규 추진보다는 노후시설 교체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예산으로 2943억원이 책정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내년부터

보조금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하수처리장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출 분류(12개 분야) 중 SOC 분야에 포함되진 않지만, 건설업계에는 신규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재정사업군에 속한다.

특히, 대부분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업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공공 발주 의존도가 큰 지방 중소건설사들에는 없어서는 안 될 ‘먹거리’다.

따라서 SOC에 이어 국가보조금 감축에 따른 환경 인프라 발주까지 줄어들면 지방 건설업계의 수주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지방 건설업체 대표는 “환경기초시설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충분한 시설이 공급돼서가 아니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만성적인 발주 지연 행태 때문”이라며 “국민생활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대표적 생활 인프라인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조금 등 국가의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협 윤리위원회 4차 회의… 불법대여 근절 등 논의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9대 윤리위원회(위원장 형남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 근절 추진 동향 보고와 함께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중소건설사 해외진출 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보

전·공기연장 방안, 건설업 영업범위 개편 등 주요 현안사항을 다뤘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업계와 산업이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지속해 나갈 때 국민 속에서 사랑받는 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다”며 “19대 윤리위가 건설업계의 건전한 윤리경영 확립을 통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및 신뢰 회복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